

학원생 상대 범죄 속출 '위험한 학원들'

강제추행 원장 수사...제자에 욕설·폭행 등 광주 곳곳 물의 잇따라 코로나에 탈법운영도 기승...교육당국 관리감독 안돼 학부모 불안

학원을 다니는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교육 당국의 관심이 방안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가 잇따라다니는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특히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반면, 사립학원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아이 다니는 학원은 괜찮을까' 광주남부경찰청은 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광주시 남구 모 학원 원장 A씨를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B양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 있는 C학원 원장은 수강생인 여고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C학원 원장은 지난 2019년 수업을 빠지거나 남자 학원생과 사귀는 이유 등을 들어 다른 수강생들이 있는데서 여고생 제자에게 심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원장도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중학생 수강생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혐의로 서구 보습학원 원장 D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학원장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원은 괜찮은 지, 학원 강사 채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교육청이 최근 3년 간 학원 근무자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하다 적발한 경우도 44건에 달했다는 점에서 학원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채용하기도=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

월 기준 광주지역 학원은 학교교과교습 학원 3204곳, 평생직업교육 학원 425곳, 교습소 1079곳 등 4708곳에 이른다. 여기에 근무하는 강사들만 무려 1만 795명(중복포함)이나 된다.

반면, 이들 학원의 운영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의 담당 인원은 고작 6명, 동부교육지원청은 4명이 전부다. 담당자 1명당 470곳의 학원을 점검하는 현실로, 사실상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등록·신고절차 없이 학원을 운영하고 교습 시간을 멋대로 위반하는가 하면,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학원도 늘어나고 있다. 밤 10시까지 정해진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도 지난해 7곳에서 올 상반기 13곳이나 적발됐다. 광주교육청은 또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간 미등록(신고) 여부 등으로 49곳의 학원을 적발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한 학원은 지난해 2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곳이 적발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방역점검 자료를 인용, 무려 1009곳의 학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 조치 등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이나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교육지원청 등은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비(계시·초과 징수 여부 등)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학원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중이지만 워낙 많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원의 체벌 등 아동학대나 성추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 등의 한계만 탓하기보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관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같이 해결책을 찾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폐기물 소각장 반대 차량 시위 평동산단 내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관 행세하며 10대 성폭력 광주지법, 50대 징역 8년 선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신분증을 내보이는가 하면, 테이저건(순간적인 전기 충격으로 상대방을 기절시켜 제압하는 무기)과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단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을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성범죄 전력으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재범을 해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위를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직 금지 위반' 영광 군의원 지위확인 소송 제기했다 패소

검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의원직 퇴직에 위기 처한 영광군 의원의 군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영광군 비례의원 A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영광군 의원에 당선됐으나, 올해 초 2019년 모 협동조합에 감사에 취임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겸직 사실을 부인하면서 영광군을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겸직이 확인되면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했다고 기재됐고,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을 보면 A씨가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 카 캐리어 사고 사망자 2명 늘어

공공근로 노인 사망 모두 5명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들을 치어 숨지게 한 여수 카 캐리어(차량을 배송하는 화물차) 사고 (광주일보 7월 20일 7면)와 관련, 사망자가 2명 더 늘어났다.

27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광주와 전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72)씨와 B(70)씨가 26일 숨지면서 당시 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노인들이다.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여수시 한재사거리에서

는 승용차 카 캐리어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 승용차 10여 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6명 중 3명이 숨지고 나머지 보행자 3명과 정차중 사고를 당한 차량운전자 6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보행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이들 중 4명이 여수시 서강동 노인 일자리 사업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들이었다.

경찰은 지난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개조 여부를 조사에서 차량

뒷부분이 개조돼 연장 된 부분을 확인했다.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카캐리어 운전자의 진술인 브레이크 파열부분을 조사했고 조만간 결과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여수시는 사고 희생자 전담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에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카 캐리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